김의겸 새만금청장,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 발표

"진정한 RE100 실현 전전기지 도약"

새정부 국정과제 맞춰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
RE100 계획 로드맵 제시
수상태양광 조기 구축
RE100 산단 등 구체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김 청장)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새만금이 단순한 개발 지역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산과 'REal RE100(진정한 RE100)' 실현의 전진 기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 청장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새만금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한 첫 행보다.

이날 김의겸 청장은 기자단 앞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새만금의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는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청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김 청장은 "사업자 선정이 이미 완료되어 그간의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고압직류송전) 사업과 연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해안에 구축될 대규모 전력 송전망을 활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생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청장은 수상태양광 2단계(0.9GW)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2단계 사업은 조속한 계획 수립을 통해 2030년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특히 "새만금 RE100 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는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이 RE100 투자 유치에 최적화된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운영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순히 태양광 발전만을 넘어선 포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김 청장은 "새만금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발전, 추가 태양광 발전,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 등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이 특정 에너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입지적 특성을 살려 해양에너지와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다각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도는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친환경 에너지 종합단지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회

17일까지 도정질문 ·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5일 제421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13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8일과 9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47건을 해당 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도지사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8일 이정린(남원1)·전용태(진안)·강태창(군산1)·서난이(전주9)·김성수(고창1) 의원이, 9일은 임종명(남원2)·김정기(부안)·이병철(전주7)·황영석(김제2)·김명지(전주10)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전북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함께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의 의안 및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한다.

문승우 의장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정책 추진과 미흡한 제도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책 절실"

임승식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불법사금융 범죄 3년새 159% 급증

2021년 1057건에서 지난해 2735건으로 늘어
수천%대 고이자 부과, 나체 사진 유포 협박도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준비중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준비에 한창이다.

의원들은 8월 말 남원시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들과 활발한 토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중앙부처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들도 참고하며 현실적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 민생과 농업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회복지인 권익 향상, 돌봄 안전망 튼튼히"

민주 도당, 사회복지의 날 맞아… "임금 기준 법제화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오는 7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인의 권익 향상을 통해 도민 돌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자치도당은 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회복지인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노인 빈곤 등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도민을 돌보는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돌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사회복지사 임금 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 권익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유급 안식월제 도입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소진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의회, 제2회 추경 확정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9월 3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대)는 심사 과정에서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6억9,70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신운천 버들길 조성사업(인건비·수목 구입비 등),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예산이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해, 향후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